

고객 곁으로 찾아가는 환경행정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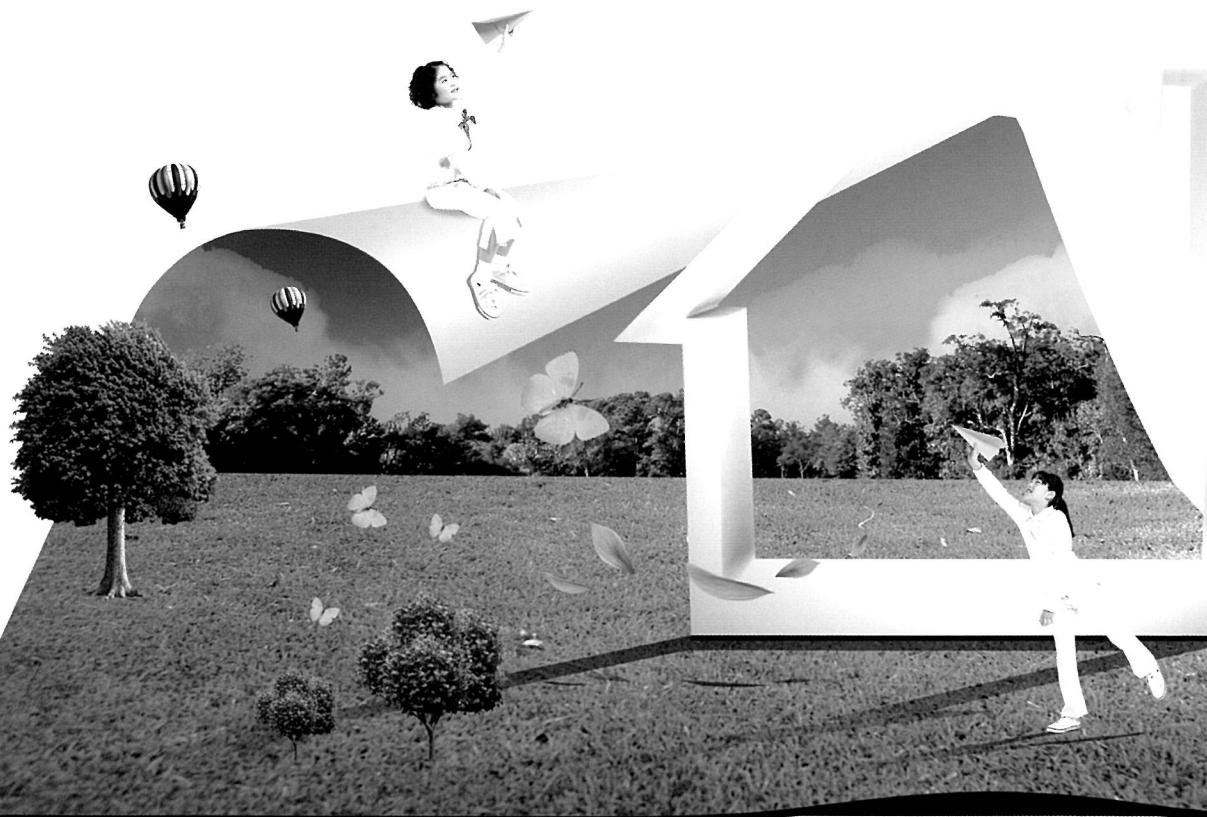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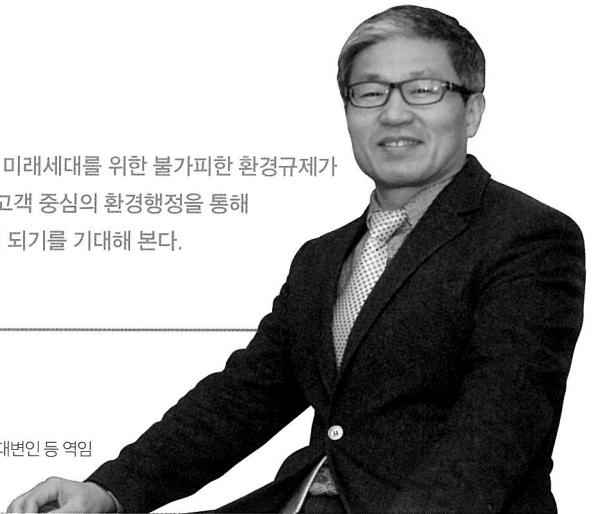
고객 곁으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환경규제가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객 중심의 환경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 영 훈 | 한강유역환경청장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졸업

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원재활용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 대변인실 대변인 등 역임

tel. 031-790-2403 | hoonky@korea.kr



정부3.0, 고객 중심의 환경영정으로의 진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국민·즉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먼저 찾아가는 여러가지 맞춤형 환경영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무상기술지원단 운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입지한 건물·시설은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은 대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주 공법으로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처리시설을 운영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방류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 한강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13년부터 “하수처리시설 무상기술지원단”을 구성, 수질관리가 취약한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처리공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운영 개선방안 제시 및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5개소 중 15개소에서 기술지원 전보다 BOD 기준으로 최저 18%에서 최고 97%까지 수질이 개선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에는 기존 무상기술지원단의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 시설 전담제 운영을 통해 개선 효과를 높이고, 현장지원을 통해 문제점 진단·개선안 도출·사후관리(예산지원)까지 연계되는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제적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화학안전 지원단 운영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근래 들어 화학 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는 단 한 번의 누출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소사업장들 중에는 영세·노후한 시설들이 많아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장들을 직접 찾아가 취약시설에 대한 진단·관리, 사고 예방 교육 및 사고대응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지원단”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화학안전 지원단은 화학·공정·안전·독성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인천, 경기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지원단은 평상시 기술지도, 안전교육 등 취급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사고 발생시 현장 및 유선 지원 등을 통해 사고물질에 대한 방제·제독 등 기술적인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현재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 맞춤형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

학교나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폐시약, 폐유, 사용한 페인트 등은 그 양은 적으나 모두 ‘지정폐기물’로 환경·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처리업소를 통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소량폐기물 배출자는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소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하더라도 비용 등의 문제로 처리업자가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등 뜻하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5개 지정장소에 해당 폐기물을 운반해 오면 처리업자가 이를 수집하여 처리토록 연결해주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2013년 한해 총 8,637kg의 지정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자의 81.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도부터는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수거장소 확대 및 예약 방문 수거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발전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동 제도의 특성상 이해관계자(사업자, 승인기관, 지역주민 등)간의 협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소모적인 갈등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찾아가는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지자체 등)에 접수하기 전단계에 있는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승인기관이 제공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환경상의 문제점 진단·고충상담·협의 등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해 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다른 환경분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환경행정3.0

이상과 같은 고객 곁으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환경규제가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객 중심의 환경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